

軍, 北해안포 사격 능력 발표에 '은폐 논란' ...北눈치보기?

김정은, 서해 접경지역 시찰 해안포 사격 훈련 지시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령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사격을 지시한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이 이를 먼저 공개하

지 않아 논란이다. 군 당국은 원래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마다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 발사했는지 '1보' 문자를 발송

지난 25일 김정은 시찰 당시 지시 북한 매체 통해 알려져

9·19군사합의 위반 같은 중대 사안에 소극적 대응 비판

하는데 이번에는 북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올 때까지 잠잠하다가 이후 대응하면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청령도 방어대의 해안포중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고 이에 사격이 이뤄졌다. 북한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청령도 해안포중대는 사거리 12km의 76.2mm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9·19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과 연대급 이상 야외공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이번 사격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된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오전 김 위원장이 청령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월23일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벌인 지 9년째 되는 날인데 북한이 이날을 노리고 포사격을 진행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9년 전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던 날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를 발사했음에도 군이 당장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능장 발표' 논란을 자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합의위반 사실을 파악했다면 그 직후 대응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를 묵혀왔다는 지적이다. 야권 일각에선 군이 북한의 발사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다 북한의 발표를 보고 그제서야 인지한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지만 대북 감청정보 보안을 우려해 발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설

불리 우리 군의 능력을 노출시킬 경우 북한에 역이용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23일 오전 미상의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다"며 "25일 북한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청령도 해안포사격으로 (최종)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안포의 종류나 제원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 입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공개하기 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9·19군사합의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순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면 관리를 위해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지원 의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위해 사진 공개 박지원,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소속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군의 정보활동을 위해 제출한 일자별, 시간대별 진상기록, 김대중 내란음모 사진 범죄개요수기 등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박지원 "檢개혁 주고 선거법 막자는 흥준표案, 건설적"

대안신당(가칭)에서 활동하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6일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고 선거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흥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선이 후난(先易後難)'이라며 '굉장히 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

뷰에서 "(흥 전 대표가) 타협안을 제안한 것은 정치적 제스처"라며 "선이후난으로 저도 주장은 '검찰 개혁 문제만 먼저 처리를 하고 선거구 조정은 좀 더 이야기를 해왔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고 선거법 개정을 막자'는 흥 전 대표의

주장은 흥 전 대표가 전날 단식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흥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6석밖에 안되는 정의당에 인질 이 돼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승민 "선거법, 필리버스터 포함 끝까지 막겠다"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통과하는 일 결코 있을 수 없어" 한국당·바른미래당 공조가능성↑...황교안 단식장 방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오전 이레재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아 황 대표와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 등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회의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혁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처음부터 반대했

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저희들은 (그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당이 중대 정당들이 통과시키려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자유한국당과는 관계없는 바른미래당의 독자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인지 물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에서도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더 나아가 21대 총선 보이콧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여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필리버스터 공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단식 7일째 접어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